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52호 | 2022년 12월 1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연희 원장직무대행 | idp.theminjoo.kr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 실상은 초부자(super rich) 감세를 통한 복지축소

윤기찬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 요약 》

■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

- (개요) 복지정책 기조로 선별적 약자 중심 현금복지, 포플리즘 복지정책 통폐합, 민간중심 참여 등 강조
- (경과) 대통령실 약자복지 강화방안 브리핑(9·15), 보건복지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구현방안 발표(11·24)

■ 문제점

- ① 약자복지 예산 증가폭보다 더 큰 공적연금지원
 -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12.9%(OECD 31개국 중 28위, 2019)
 - 사회복지예산 중 공적연금 지원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순수 약자예산 22.8% 수준
- ② 2023년도 예산안에서 오히려 삭감된 약자예산
 - 노인돌봄 예산 77.8% 삭감, 노인일자리 6만 1000개 감소, 서민 임대주택 용자 약 4.5조 삭감
- ③ 초부자(super-rich) 감세러 빈부격차 더욱 악화 예상
 - 상위 20% 자산 격차 64배 역대 최고치에도 조세지출, 법인세 인하 등으로 32.8조 부자감세 가능
 - 전체 약자복지 예산 21조의 약 1.6배에 해당, 약자 중심 복지는 허구에 불과

■ 정책제언

- 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예산 방향 수정
 - 내년도 부자감세 예산 38.2조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 2021년 OECD "Better Life Index" 41개국 중 32위, 부자감세 축소로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 제고 필요
- ② 민생위기 폭발에 대응하는 민주당표 보편적 복지예산의 복원
 - 청와대 영빈관 신축 등 윤석열정부의 소모적 예산은 삭감, 공공임대주택·노인일자리·지역화폐 등 민주당표 복지예산 복원 필요
- ③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민주당 비전 구축
 - 약자복지만 키우는 어리석은 정부보다 서민 예산증액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똑똑한 민주당
- ④ 시대상황에 맞춘 국민감세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강화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조정 세액 공제 상향 등 국민감세로 전 국민이 잘 사는 사회 구축

▶ 키워드: 약자복지, 부자감세, 보편적 복지, 빈부격차, 선별적 복지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안)

○ 9·15 대통령실 약자복지 강화방안 발표

- (개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약자복지, 포플리즘 지양, 민간 참여중심 등 발표
- (약자복지) 선별 지급을 바탕으로 한 약자 중심의 현금복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율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포플리즘 지양) 포플리즘 복지 정책의 통폐합을 통한 군살 빼기
 -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 강화, 통폐합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폐지권한 추가 입법
- (민간참여) 교육과 돌봄, 건강 등 서비스 복지의 민간참여 통한 서비스 고도화
 -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 프로그램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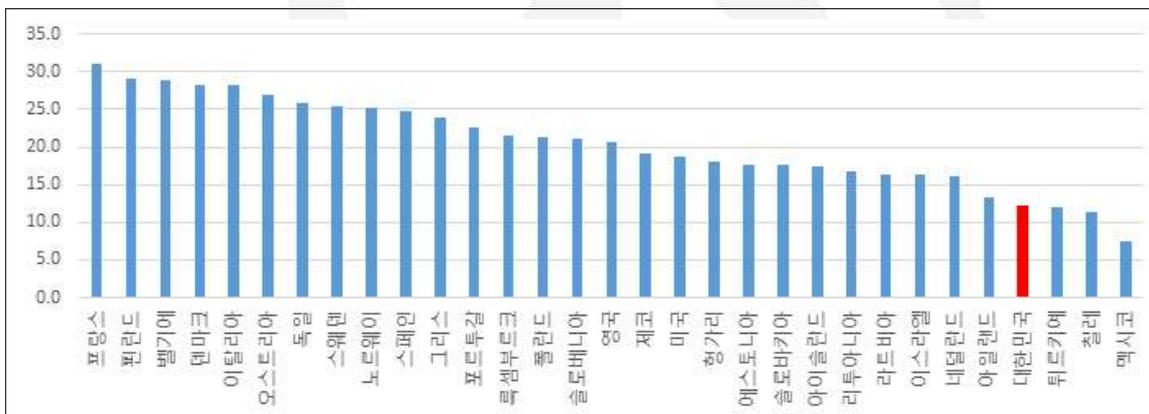
○ 11·24 보건복지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구현방안 발표

- (개요) 약자복지 구현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 (정확성) 위기정보 입수 확대, 민관협력 통한 지역기반 발굴,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 (지원) 발굴대상 연락처 연계, 복지멤버십, 기초보장제도 강화 등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 (新사각지대) 고독사 예방·관리, 취약청년 발굴·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사각지대 발굴

2. 문제점

○ 문제점 ① 약자복지 예산 증가폭보다 더 큰 공적연금지원

- (OECD 비교) 2019년 약자복지 포함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2.9% 불과
 - 캐나다 등 통계치가 없는 5개국을 제외하면 OECD 31개국 28위에 불과



- (약자복지예산) 2023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아동·보육, 노인 등 취약계층을 총망라한 예산은 58.6%(약 54조), 나머지 공적연금, 사회복지일반 예산 41.3%,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은 각각 16.4조, 4.6조원 등으로 전체 예산 중 22.8%에 불과
 - 사회복지지출 중 공적 연금(약 37조)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중산층 대상 급여

(단위: 억 원, %)

	2022년		2023년 예산안(C)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본예산(A)	추경(B)		증감(C-A)	%	증감(C-A)	%
총 지출	974,767	1,014,100	1,089,918	115,151	11.8	75,818	7.5
【사회복지】	806,484	818,709	920,659	114,175	14.2	101,950	12.5
기초생활보장	144,597	155,372	164,059	19,462	13.5	8,687	5.6
취약계층지원	41,482	41,500	46,026	4,544	11	4,526	10.9
공적연금	314,921	314,921	371,590	56,669	18	56,669	18
사회복지일반	9,072	9,061	9,634	562	6.2	573	6.3
아동·보육	91,820	90,773	98,206	6,386	7	7,433	8.2
노인	204,592	207,081	231,143	26,551	13	24,062	11.6
【보건】	168,283	195,391	169,259	976	0.6	△26,132	△13.4
보건의료	49,041	76,149	45,157	△3,884	△7.9	△30,992	△40.7
건강보험	119,242	119,242	124,102	4,860	4.1	4,860	4.1

자료: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2022)

- (증감률) 2022년 추경 대비 2023년 약자복지 예산증감률은 기초생활보장 5.6%, 취약계층지원 10.9% 증가에 불과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증감률 18.0%보다 적고,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감률 12.5%에도 미치지 못함
 - 윤석열정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예산비율 22.8%, 증감률 5.6%로 약자중심 복지는 허구

○ 문제점 ② 2023년도 예산안에서 오히려 삭감된 약자예산

- (어르신) 약자복지 핵심 노인돌봄 예산 77.8%(123억) 삭감, 노인일자리 6만 1000개(922억) 감소 약자복지 역행
- (임대주택) 서민 임대주택 융자금조차 약 4.5조 이상 28.8% 삭감
- (지역화폐) 2022년 본예산 6천5백억 포함 8천50억의 국고 지원, 지역화폐 발행 총액 총 30조 원에서 전액 삭감, 여당 소속 단체장 포함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에게 직격탄 이유로 거센 반발
- (초등돌봄) 초등학생의 간식지원 예산 72억 전액 삭감,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방해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6,724억, 미숙아지원 약 32.9억 삭감하여 청년세대 지원 약화

(단위: 백만원)

예산항목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증감률
어르신돌봄	15,800	3,500	-77.8%
공공형 노인일자리	919,300 (60만 8,000개)	827,100 (54만 7000개)	-10.0%
임대주택지원(융자)	15,648,656	11,139,993	-28.8%
지역화폐	605,000 (본예산 기준)	0	전액삭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7,200	0	전액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1,309,900	637,500	-51.3%
미숙아지원	4,834	1,542	-68.1%

○ 문제점 ③ 초부자(super rich) 감세로 빈부격차 더욱 악화 예상

- (빈부격차) 상하위 20%(1,654,570,000원 vs. 25,840,000원) 자산 격차 64배,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
- (조세지출) 2023년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이 13.5조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21조의 64.2%, 대기업 조세지출 4조 2천억 약자복지 예산의 약 40%
 - 조세지출예산 중 고소득자 31.2%, 대기업 16.7% 등으로 총 예산 규모 17.8조원(약자예산 84.7%)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① 중·저소득자	273,047	68.4%	297,942	68.8%
	② 고소득자	126,249	31.6%	135,360	31.2%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165,224	71.2%	177,972	70.0%
	②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35,985	15.5%	42,443	16.7%
	③ 기타기업	30,812	13.3%	33,875	13.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08)

- (세금인하)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증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법 관련 정부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 해 약 15조원, 향후 5년간 약 74조원 세수 감소
 -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정부 때 이미 경험한대로 낙수효과보다 소수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 불과
- (초부자예산) 100여 개 슈퍼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 주식개미엔 세금징수, 수십억 주식부자엔 세금 감면, 3채 이상 다주택자도 세금감면 주장 등 초부자(super rich)를 위한 예산안

	정부 세제개편안	국민의힘 입장	더불어민주당 입장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	"인하가 세계적 추세, 경제 효과"	"초부자 감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따른 차등과세→가액기준 과세	"조세원칙 맞게 정상화"	"다주택자 지대 추구 지원 위한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및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	증권거래세 인하 등 조건부 유예안 제시
상속세법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중산층·서민 위한 투자·일자리 확대 차원"	"부유층 자산세습 위한 개편"

자료: 헤럴드경제(2022.11.24. 신문기사 중)

3. 정책제언

○ 정책제언 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예산 방향 수정

- (필요성) 조세지출 및 감세 규모 축소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예산 강화
 - 초부자 조세지출 및 감세규모(32.8조)는 선별적 복지 중심의 약자복지 예산(21조)의 1.6배

- (보편적 복지) 약자복지와 함께 일반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강화 필요
 - 2021년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41개국 한국 32위, 삶의 만족도 35위에 불과
- (예산확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및 법인세 조정을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 정책제언 ② 민생위기 폭발에 대응하는 민주당표 복지예산의 복원

- (예산복원) 윤석열정부 소모적 예산 감액,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민주당표 서민예산 복원
- (예산증액) 청와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 증 약 1조 2천억을 전부 감액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 내일채움공제, 노인일자리, 신재생에너지 등 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 확충
- (시대전환) 선별적 약자 대상 현금 지급방식에서 청년, 노인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시대전환
 - 복지에 의존하기(on welfare)보다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웰빙(well-being) 사회로 전환

감액 대상 '윤석열표 예산'	증액 대상 '이재명표 예산'
▷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800만원	▷ 공공임대주택 6조3840억원
▷ 청와대 개방·활용 59억500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5000억원
▷ 영빈관 신축 497억원	▷ 신재생에너지 1668억8600만원
▷ 외교네트워크 구축 21억7400만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192억6000만원
▷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 29억600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611억원
▷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20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139억3200만원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 분양 주택 용자 예산 1조1393억	
▷ 경찰국 기본 경비 2100만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5억5100만원	
▷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44억1000만원 등	
약 1조2000억원	약 7조2000억원

자료: 헤럴드경제(2022.11.24. 신문기사 중)

○ 정책제언 ③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민주당 비전 구축

- (신뢰제고) 약자복지 예산만 키우는 어리석은 정부가 아니라 서민예산 증액을 통해 전 국민의 복지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똑똑한 민주당(Smart Government)에 대한 신뢰 제고
- (기본서비스) 세금 감액 또는 감면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 대신 교육, 에너지, 교통, 통신, 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정책제언 ④ 시대상황에 맞춘 국민감세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강화

- (국민감세)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조정(1200만원→1400만원),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세액 공제 상향(12%→17%) 등을 통한 중산층 혜택 강화
- (불평등해소) 부자감세 축소, 국민감세 강화 등을 통해 약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기본사회 구축(Coote & Percy, 2020)
 - “버핏법안” 등과 같이 부자증세를 통해 약자와 일반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구축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2).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

김진석. (2022). 2023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총론. 「월간복지동향」, 18.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2022).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헤럴드 경제. (2022. 11. 24.) “639조 예산전쟁”.

Coote, A. & Percy, A. (2020).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Polity Press.

